

제5회 식량안보세미나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

■ 일시 : 2011년 8월 18일(목) 13:30~17:30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인정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한국인정원
Korea Accreditation Board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13 : 00	등 록	
13 : 30	개 회 식	사 회 : 박영식 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개 회 사	안명수 회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환 영 사	오일근 원장 (한국인정원)
	축 사	김학용 의원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14 : 00	주제강연	좌 장 : 신동화 교수 (한국식품안전협회장)
	1. 현 물가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 발표자 : 윤종원 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2.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발표자 : 이철호 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5 : 00	종합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장 : 박용호 (서울대 수의미생물학과 교수) - 토론자 : 곽범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장) 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 박태균 (중앙일보 기자)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관) 손성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이군호 (식품음료신문사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최성환 (한국인정원 심사기획단장)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 황이남 (한국식품기술사협회장)
17 : 30	폐 회	

목 차



* 개 회 사	안명수 회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1
* 환 영 사	오일근 원장 (한국인정원)	3
* 축 사	김학용 의원 (국회 농수산식품위원장)	5
* 주제강연	좌장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1. 현 물가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	
	윤종원 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9
	2.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이철호 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3
* 좌 장	- 박용호 교수 (서울대 수의미생물학과)	
* 토론내용	- 광범국 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53
	- 김동환 교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59
	- 박태균 박사 (중앙일보 식품전문기자)	65
	- 박혜경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관)	71
	- 손성락 국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77
	- 신영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85
	- 이군호 사장 (식품음료신문)	91
	- 이향기 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99
	- 최성환 단장 (한국인정원 심사기획단)	105
	- 최지현 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111
	- 황이남 회장 (한국식품기술사협회)	117

개 회 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안 명 수



안녕하십니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안명수입니다.

먼저 식품의 합리적인 가격 시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주제인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에 공동 주최로 참여해 주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님과 한국인정원 오일근 원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해주시고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김학용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으신 기획재정부 윤종원 국장님과 많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물가안정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까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물가상승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품목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물이며, 이는 국제곡물가격인상, 작황부진, 구제역과동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식품가격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과자업계 등에서 소비자가격을 대폭 인상시켰으며, 아직 인상시키지 못한 업계에서는 원재료의 가격 인상요인을 원가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식품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오늘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 학계 소비자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식품가격 상승은 정당한 것인가, 식품가격 상승을 주도한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가격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가격이 싸면서도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식품가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식품시장의 안정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품 선택 기준과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취해야할 지속가능한 소비자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소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1년 8월 18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안명수**

환영사

한국인정원 원장 오 일 근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오늘의 토론회를 빛내 주시고 축하해 주신 김학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토론회 개최를 주도하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님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안명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역할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한국인정원은 ISO 경영시스템 인증이 국내에서 신뢰를 받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활동을 하는 100여개의 인증기관들을 정부를 대행하여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공공기능의 집행이기 때문에, 산업경제 활동의 전면에 나서거나 홍보·광고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 우리 기관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개별 인증기관들이 여러 광고 활동 등을 통해 여러분께는 친숙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근거한 여러 훌륭한 제도 등이 있습니다. 한편, ISO 22000은 선진국을 필두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자율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표준규격이며, 우리 한국인정원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를 통해,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수많은 인증제도가 식품 가격 상승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는 점과, 각각의 장점을 가진 인증제도를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제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국내 법에 의해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 수입식품이나 수입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하는 점도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세미나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들과 모든 참석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트렌드에 접하시게 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18일

한국인정원 원장 **오일근**

축 사

국회의원 농수산식품위원회 김 학 용



주제강연 좌장



한국식품안전협회
신 동 화 회장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경 력

(사)한국식품안전협회장

신동화식품연구소 소장

(사)한국장류연구회 회장

식품산업진흥위원회 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 분과위원장(식약청)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사)한국식품과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 식품공학전공 교수(현 명예교수)



1. 현 물가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윤 종 원 국장





Profile

윤 종 원

학 력

UCLA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 력

재무부
재정경제원
IMF 근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현 물가 상황 평가 및 정책대응

2011.8.18.

윤충원 경제정책국장

제5회 식량안보 세미나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주요 내용

◆ 현 물가 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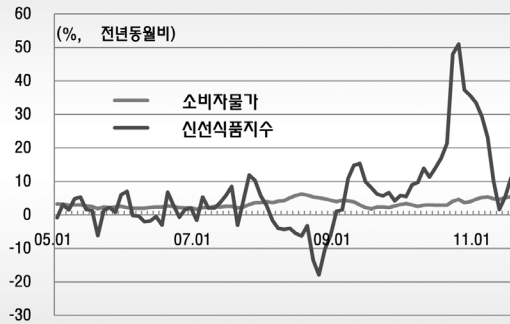
◆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 정책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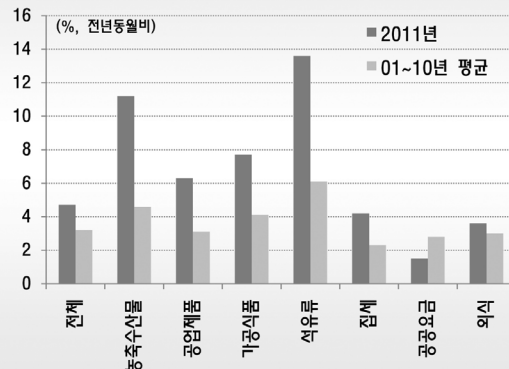
현 물가 상황

-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7%로 금년 들어 4%대의 높은 수준 지속
- 특히, 농축산물, 석유류 및 가공식품 등의 상승세가 물가 상승을 견인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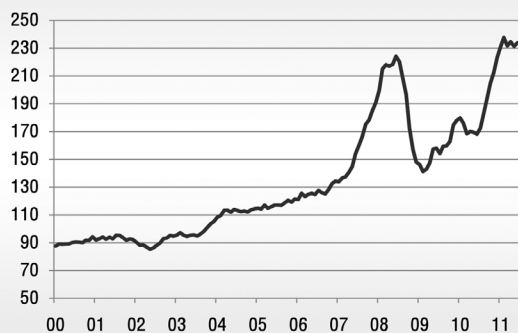
7월 품목별 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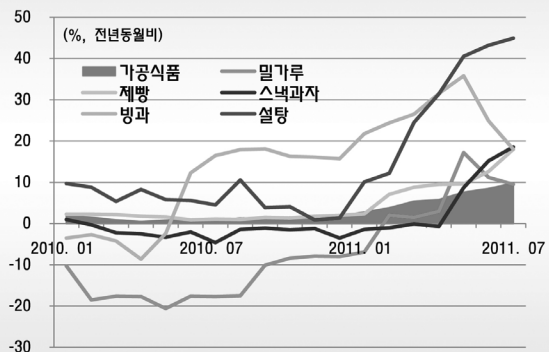
식품 물가 동향

- 전 세계적인 작황 부진으로 국제곡물가격 등 전세계 식품가격이 크게 상승
- 가공식품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연초부터 상승세 지속

세계 식품 가격 동향(UN FAO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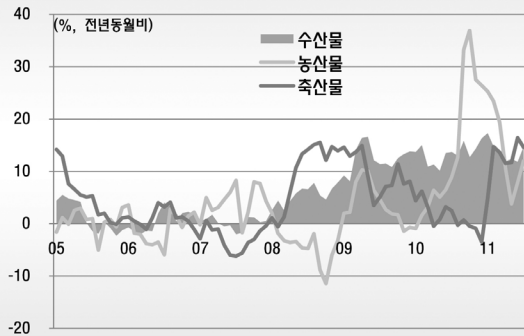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최근 물가 상승 원인 : 공급측 충격 발생

- 공급측면의 물가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집중되어 발생
 -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부진, 구제역 피해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
 -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세 지속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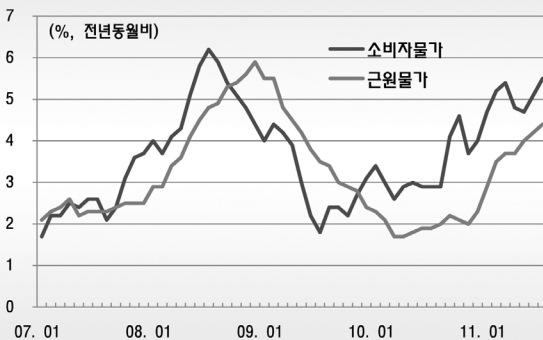
원유 및 석유류 가격 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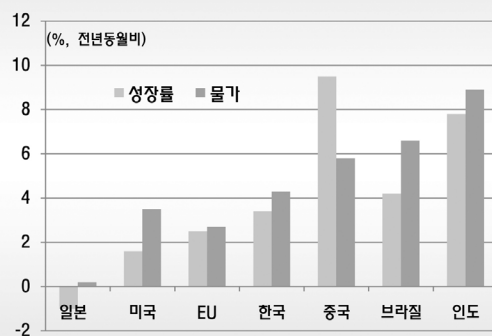
최근 물가 상승 원인 : 수요측 압력도 가시화

- 공급측 요인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7월 3.8% 상승
-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경우, 물가도 대체로 높은 수준

근원물가 상승률 주이



주요국 성장률과 물가와의 관계(11.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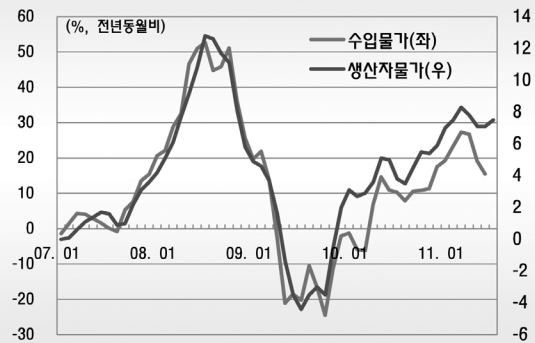
향후 물가 전망

- 소비자물가는 9월 이후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
- 기상여건, 이른 추석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IMF 물가 전망(10.10월 →11.6월)

	2011년 전망(%)		
	당초 (A)	변경후 (B)	차이 (B-A, %p)
선진국	1.3	1.6	+0.3
신흥국	5.2	6.0	+0.8
한국	3.4	4.3	+0.9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주위



주요 내용

◆ 현 물가 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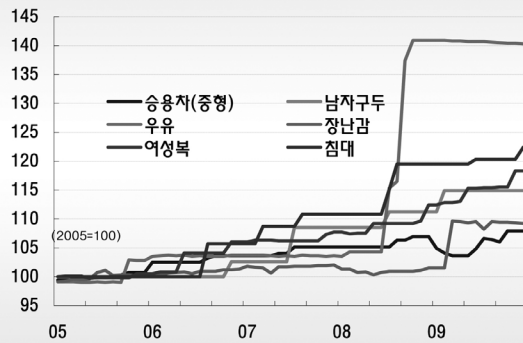
◆ 우리나라 물가 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 정책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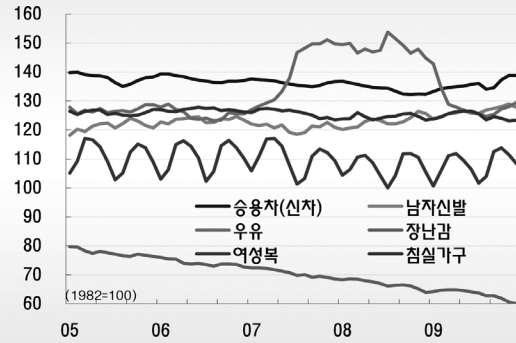
우리나라 물가의 특징[1] – 하방경직성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때 쉽게 오르고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
 -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이 하방경직성의 주원인
 -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경쟁도 하방경직성을 심화

한국의 주요 품목별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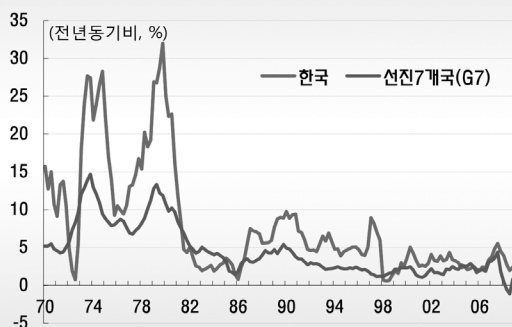
미국의 주요 품목별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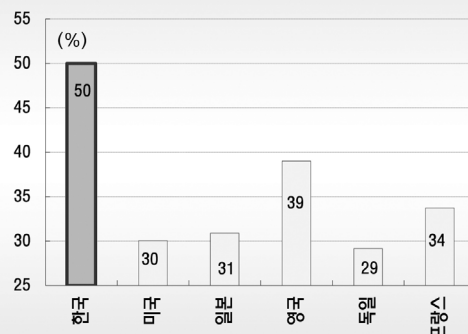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2] – 높은 기대인플레이

- 높은 성장세 및 통화 증가 → 높은 기대인플레이
 - 00년 이후 기대인플레이션(한은) : [주요선진국] 2~3% [한국] 3.5% 내외
-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소비자물가비중이 크고, 상승률이 높음

소비자물가 추이



서비스부문의 소비자물가 비중



우리나라 물가의 특징[3] – 큰 변동성

- 우리나라 물가의 변동성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 낮은 곡물자급률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공급구조
 -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감시 미흡 등 시장의 낮은 물가충격 흡수력

소비자 물가 변동폭(표준편차)

	한국	미국	영국	유럽	OECD
90~97	1.88	1.06	2.26	0.82	0.89
98~09	1.74	1.35	0.84	1.80	1.07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변동폭(표준편차)

98~09	한국	미국	영국	유럽	OECD
식료품	3.49	1.89	3.20	2.50	1.65
에너지	10.03	13.62	6.79	5.96	8.4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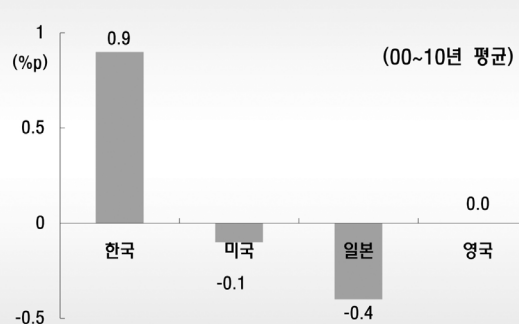
우리나라 물가의 특징[4]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

-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높게 상승
 -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진입장벽 등에 따른 생산자우위의 가격결정 관행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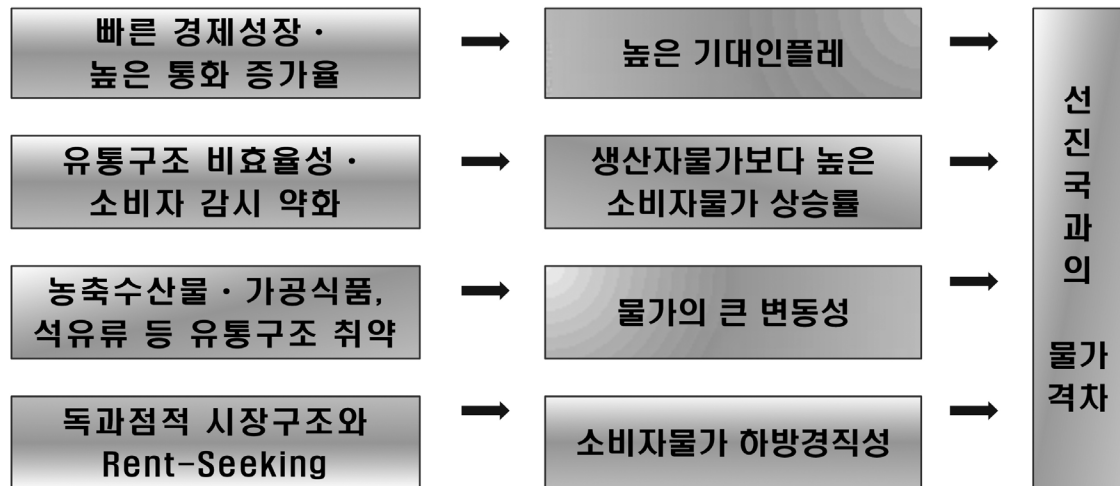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 격차



12

종합 평가

- 거시경제 여건, 독과점적 시장구조, 비효율적 유통구조, 소비자감시기능 약화
→ 물가상승률(inflation)과 물가수준(price level)이 높은 주요인



13

주요 내용

◆ 현 물가 상황 평가

◆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

◆ 정책 대응

14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거시 정책

- 경제여건에 부합한 Inflation target 설정
- 총수요 및 인플레이 기대 관리

미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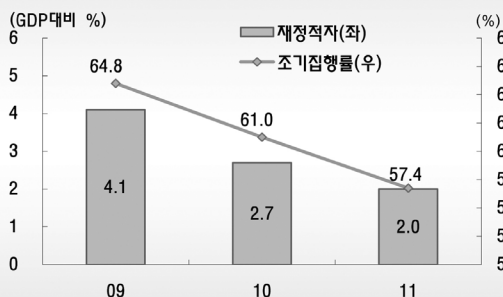
- 수급 안정, 경쟁촉진, 유통 및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응
- 물가관리 정책
 - 공공요금, 임금 억제 등 소득 정책
 - Coordination failure 문제 (Bad Nash vs. Cooperative solution)
-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과 시장의 기대
 - 미국 vs. 개도국 vs. 한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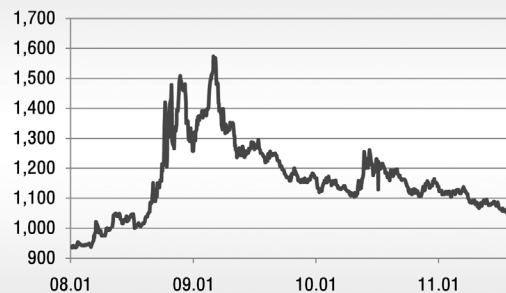
물가 정책 방향

-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
-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 * sacrifice ratio
- “수급” 과 “심리” 안정 및 “구조” 개선을 위한 미시정책 추진

재정적자 및 조기집행률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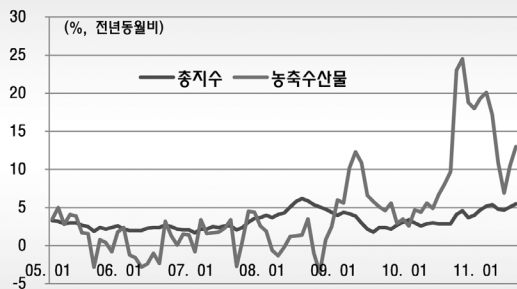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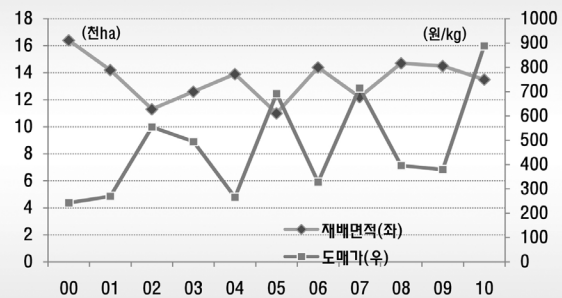
농산물 수급 안정

- 단기적 수급 불안 → 비축물량 조기방출, 할당관세 인하
- 높은 공급변동성 → 농업관측 및 계약재배 확대 등 수급안정 시스템 강화
- 중장기 식량 수급 문제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비축 등 공급기반 강화

소비자물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가을 배주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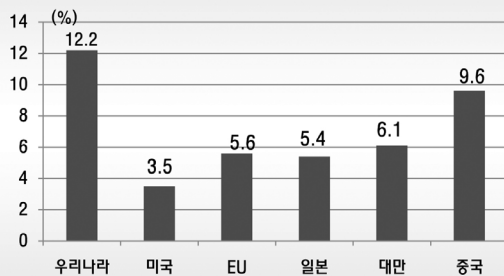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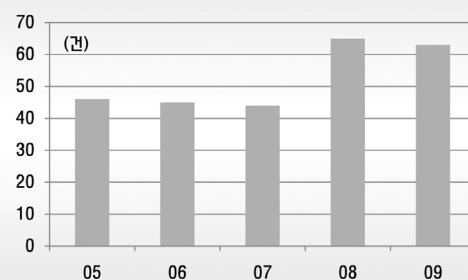
공산품 등 경쟁 촉진

- 소비자-생산자간 정보 비대칭성 → 정보공개 확대
 - 공산품 가격 정보 공개 확대(T-price, 80개 → 100개품목), 국내외가격차조사 실시
- 높은 관세율로 인한 경쟁 제한 → 관세율 수준 적정성 평가 및 개편 검토
- 담합, 편승인상, 출고지연 등 불공정거래 행위 → 공정경쟁 감시 강화
- 진입제한으로 경쟁 저해 → 의료, 교육, 통신, 에너지 등 진입규제 개선

평균 관세율 비교



국내 담합 조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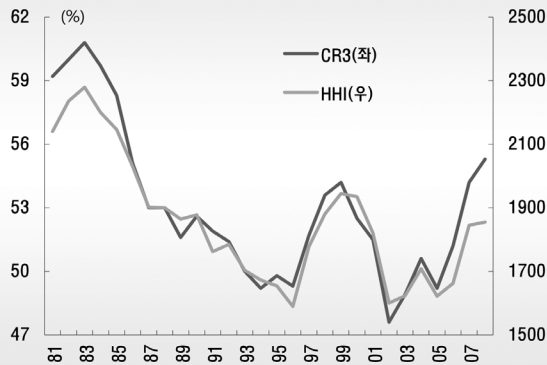


18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 우리나라의 작은 시장규모 →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독과점 확대
- 석유가격 T/F → 석유제품 가격 공개 확대,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등 경쟁 촉진
- 통신요금 T/F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재판매사업자 등 경쟁 활성화

전 산업의 시장집중도 추이



정유사와 이동통신사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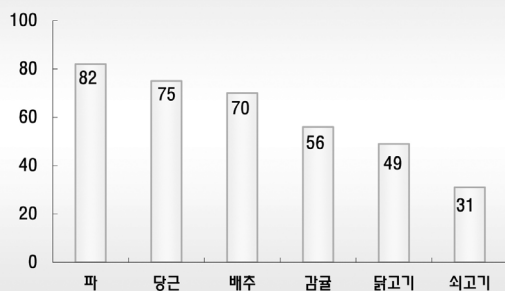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정유사	SK	39.1	38.5	38.9	37.8
	GS	32.2	32.6	32.0	31.7
	쌍용	12.7	13.1	13.2	13.8
	현대	15.3	15.1	15.3	16.1
통신사	SKT	50.5	50.5	50.6	50.6
	KT	31.5	31.5	31.3	31.6
	LGT	18.0	18.0	18.1	17.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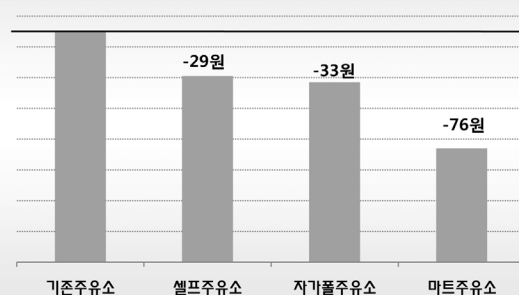
유통구조 개선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산지유통인제도 개선, 직거래장터 확충 및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직거래 확대
-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 원가절감형 주유소 확산, 전자상거래, 선물시장 개설
-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 업체별, 단계별 유통산업 구조 및 경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기존 주유소 대비 휘발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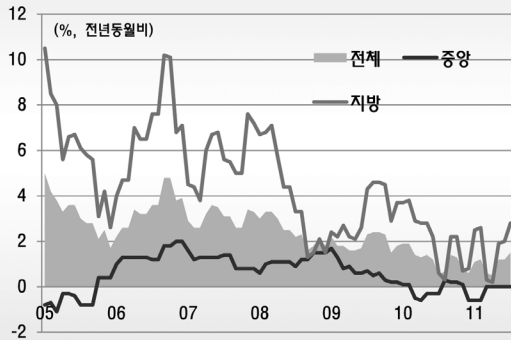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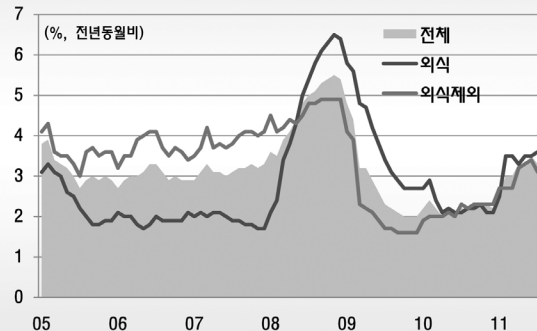
공공요금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지원 등 유인체계 마련
- 지자체별 공공요금 · 개인서비스 요금 공개 → 지자체 책임성 제고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동향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



21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2

2.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 철 호 교수





Profile

이 철 호

학 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농학사)

덴마크 왕립수의농과대학 대학원 식품저장학교실(농학박사)

경 력

미국 M.I.T.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부설 식품가공핵심기술연구센터 소장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회장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장,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회장

한국식품과학회장, 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 초대회장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 회장

Codex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의장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민간위원협의회 의장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현)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현)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현)국제식품과학기술한림원(IAFoST) 회원

(현)한국인정원 식품안전미래포럼 위원장

(현)미국 식품공학회(IFT) Fellow

(현)UN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Consultant)

(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현)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발표요약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식품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FAO가 월별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세계 식품가격지수는 2002/04를 100으로 했을 때 2011년 초에 230을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2007/08연도의 세계 곡물파동시 보다 더 높은 값이며 이와 같은 식품가격 폭등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활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져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에 힘입은 것으로, 한편으로는 농수축산 업계와 식품제조업,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의한 식품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면 아래 다섯 가지 요인을 거론할 수 있다.

(1) 원자재 가격 상승, (2) 가공식품에 대한 역관세 차별, (3) 식품안전관리비용의 증가, (4) 유통비용의 증가, (5) 식품의 저장, 가공, 유통 중 폐기식품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가격상승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가격의 급등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 조정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식품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점진적인 식품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 세계는 지금 식량 과잉의 시대에서 식량 부족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식품가격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무리하게 억제하였다가 더 견딜 수 없어 폭등하게 해선 안 된다. 점진적인 가격 인상으로 국민이 세계 식량사정의 변화에 준비 되도록 해야 하며 식량을 더 생산하고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식품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획일적인 품목별 가격 통제 보다는 품질등급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부자와 가난한자가 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품질고급화로 한국 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쌀의 등급화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 (3) 신기술에 의한 생산비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 방사선조사기술로 식량의 수확 후 손실을 막으며 폐기식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생명공학(GM)식품의 소비 확대로 값싼 수입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 진다.
- (4) 합리적인 식품안전 기준과 관리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식품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는 관행을 버리고 철저한 위험편의 분석에 근거한 식품안전 기준 설정과 비용효과 분석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와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안전관리 경영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며 식품가격을 고려한 식품안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 (5) 폐기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교육을 통해 유통기한에 대한 바른 상식을 가르치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게 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통기간 경과 이후 가식기간을 표시하여 반값판매 또는 Food Bank에서 활용하도록 제도화 한다.
- (6)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그리고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교육과 성숙한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임을 인식하고 지원 육성하려는 사회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건전한 음식문화야말로 앞으로 닥칠 세계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자세이다.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이 철 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목차 ◀

- 1 국내외 식품가격 변동추이
- 2 가격상승 요인 분석
- 3 가격상승 완화를 위한 전략
- 4 식량안보를 위한 가격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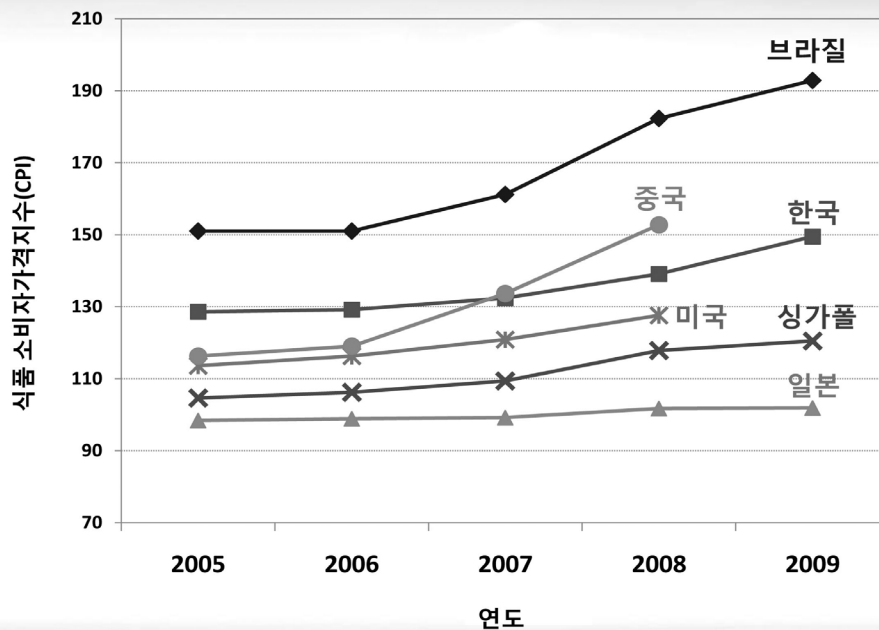


FAO 식품가격지수 변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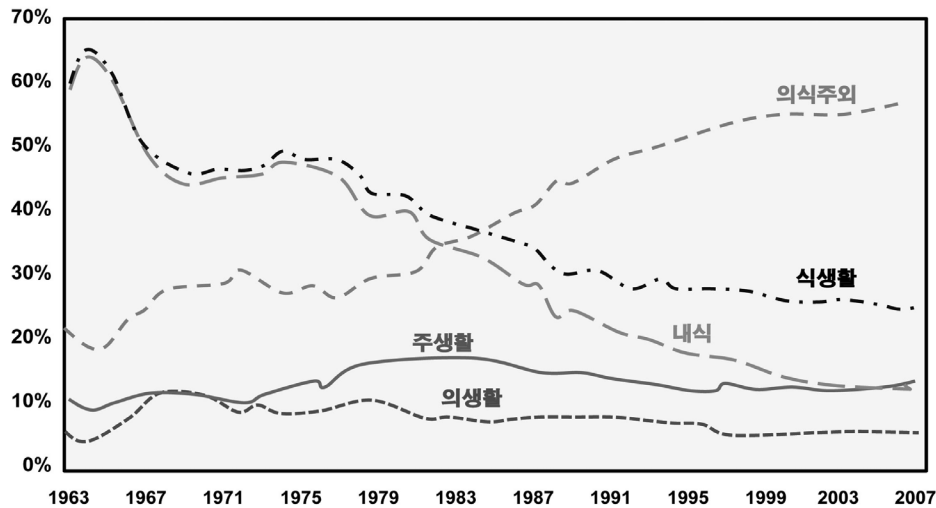
(자료: FAO, 2011)

국가별 식품가격 변동 추이



(자료: FAO, 2010)

한국 도시가계의 생활비 지출구조의 변화



(자료: 김난도, 2009)

주요 소비항목 순위의 변화 (단위:%)



	1970	1980	1990	2000	2008
1위	곡류 및 식빵 20.0	곡류 및 식빵 14.7	회비및교제비 6.7	외식 10.8	잡비 13.3
2위	육류 8.2	육류 7.5	곡류 및 식빵 6.5	개인교통 8.2	외식 11.9
3위	교육 7.6	외의 6.6	외식 6.5	회비및교제비 7.4	개인교통 8.7
4위	외의 7.5	교육 6.3	외의 4.7	보충교육비 4.8	기타교육훈련비 7.8
5위	채소해조류 7.1	채소해조류 5.5	육류 3.8	통신 4.7	통신 5.7
6위	연료 4.8	연료 5.4	기타 3.8	납입금 4.6	납입금 4.3
7위	이미용 4.4	잡비 5.1	납입금 3.7	곡류및식빵 3.5	보건의료서비스 3.4
8위	기타피복 4.0	조미식품 3.8	채소해조류 3.6	외의 3.2	외의 3.0
9위	조미식품 3.7	월세 3.0	개인교통 3.6	공공교통 3.1	공공교통 2.6
10위	담배 3.6	빵 및 과자류 2.6	보충교육비 3.4	육류 2.8	교양오락서비스 2.6
합계	70.9	60.5	46.3	53.1	63.2

(자료: 김난도, 2009)

식품의 소비자물가 가중치 변화

* 가중치: 도시가계 소비지출총액을 1000으로 하였을 때 개별품목이 차지하는 구성비

품목	1975년	2005년
제분,제당, 빵, 과자, 국수류	35.0	15.7
조미료 및 유지가공품	9.4	3.9
육류 및 낙농가공품	5.5	14.4
수산가공품 및 과일, 채소가공품	3.3	8.0
음료가공품 및 기타가공품	7.2	11.5

(자료: 김난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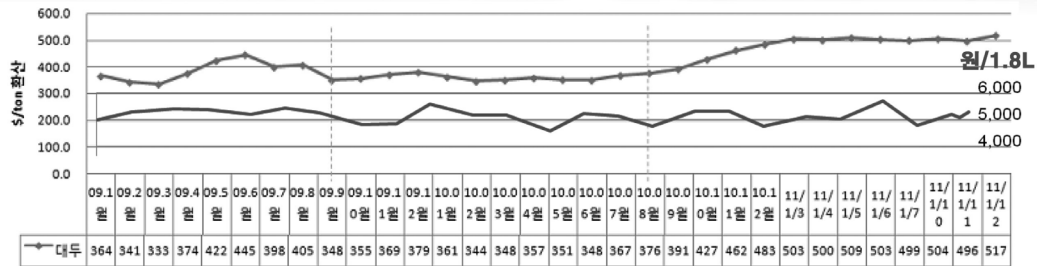
가중치 상위품목의 변화

순위	1980년		2005년	
1위	쌀	130.1	전세	66.4
2위	전세	53.8	이동전화통화료	33.8
3위	연탄	40.1	휘발유	31.2
4위	납입금(고등)	33.7	월세	31.1
5위	외래진료비	33.4	전기료	19.0
6위	월세	27.5	도시가스	16.1
7위	시내버스료	27.5	납입금(사립대)	15.4
8위	쇠고기	23.3	쌀	14.0
9위	담배	19.0	왜래진료비	12.6
10위	쓰레기봉투료	17.6	공동주택관리비	12.5
11위	고춧가루	15.8	시내버스료	11.4
12위	배추	14.2	가정학습지	11.4
13위	돼지고기	11.5	경유	10.9
14위	택시료	10.0	맥주(외식)	9.9
15위	남자정장	9.2	보육시설이용료	9.8

(자료: 김난도, 2009)



최근 2년간 대두유 및 국제 대두가격 변동추이(2009-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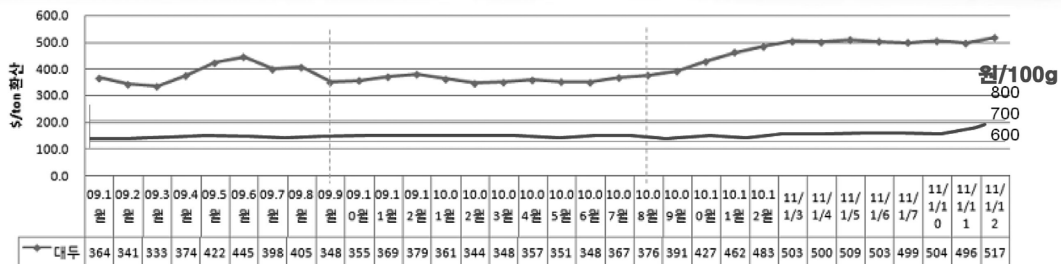
대두가격: 시카고상품거래소 (CBOT : Chichago Board of Trade)
자료: FAO(2010), 식품산업통계정보(2011)

품목별 2009, 2011년 가격 비교

품목	2009. 1	2011.1	증가율(%)
대두(달러/ton)	364	513	40.9
대두유(원/1.8L)	4,978	5,173	3.9



최근 2년간 국내 두부가격과 국제 대두가격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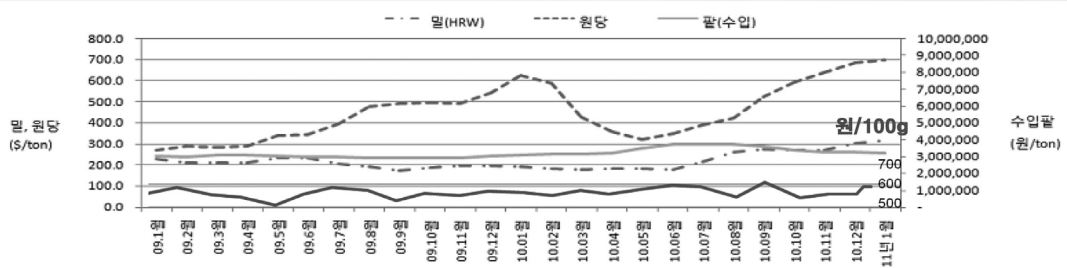
대두가격: 시카고상품거래소 (CBOT : Chichago Board of Trade)
자료: FAO(2010), 식품산업통계정보(2011)

품목별 2009, 2011년 가격 비교

품목	2009. 1	2011.1	증가율(%)
대두(달러/ton)	364	513	40.9
두부(원/100g)	614	680	10.7



최근 2년간 단팔빵 가격과 원료가격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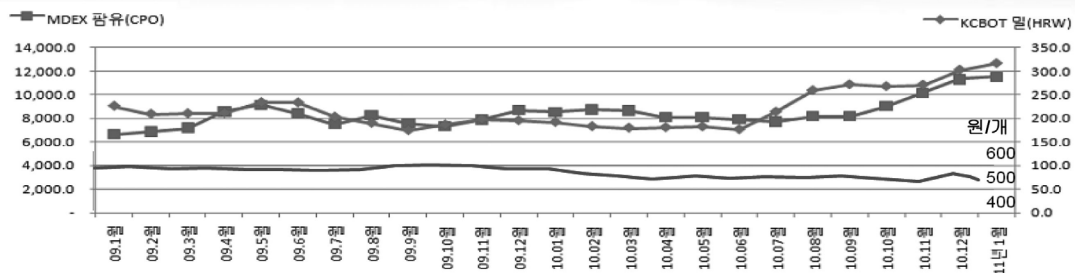
밀(HRW, KCBOT), 원당(NYBOT), 팥(국내 도매가격, KAMIS)
자료: FAO(2010), 식품산업통계정보(2011)

품목별 2009, 2011년 가격 비교

품목	2009. 1	2011.1	증가율(%)
밀(달러/ton)	227	295	30.0
원당(달러/ton)	281	707	151.6
팥(만원/ton)	398	482	21.1
단팔빵(원/100g)	562	590	5.0



최근 2년간 라면 소매가와 주요 원재료 국제시세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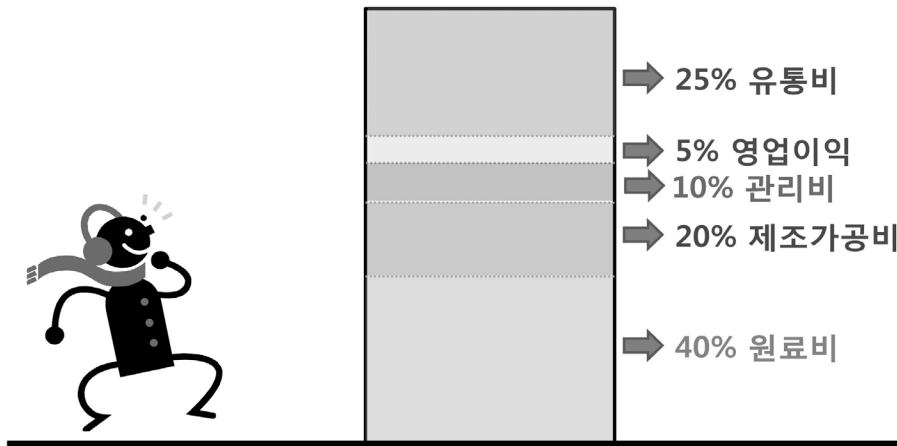
밀(HRW, KCBOT), 팥유(\$/톤) : Crude Palm Oil (MDEX :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
자료: FAO(2010), 식품산업통계정보(2011)

품목별 2009, 2011년 가격 비교

품목	2009. 1	2011.1	증가율(%)
밀(달러/ton)	227	295	30.0
팥유(달러/ton)	695	1221	75.7
라면(원/개)	590	552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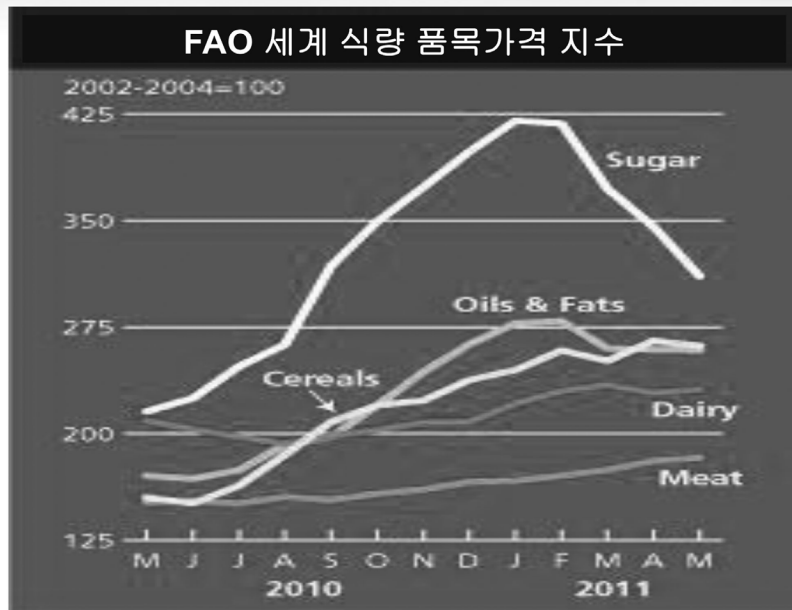
식품가격 구성 요소



식품가격 상승 5대 요인

1. 원자재 가격 상승
2. 가공식품에 대한 역관세 차별
3. 식품안전관리 비용의 증가
4. 유통 비용의 증가
5. 저장 가공 유통 중 폐기식품 손실

1. 원자재 가격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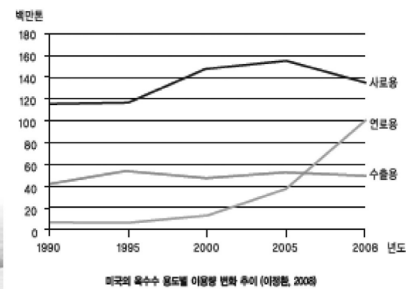


(자료: FAO, 2011)



세계 식량 가격 상승 원인 ↶

- ❖ 기후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과 사막화
- ❖ 중국과 인도의 동물성식품 수요 급증
- ❖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의 생산
- ❖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한 곡물시장 교란
- ❖ 유가급등에 의한 생산 및 수송비 증가



2. 식품산업의 역관세 차별

식품원료		가공제품	
품목	관세율 (%)	품목	관세율 (%)
분유/유제품	40	케익/과자류	8
아몬드, 캐시우너트	30	아이스크림	8
땅콩유, 해바라기유	30	마아가린/쇼트닝	8
락토오스	20	초콜릿	8

(자료: 이철호 외, 2009)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율 비교

제품명	한국	G-7 국가평균	OECD 국가평균
껌	8.0	16.2	27.9
캔디	8.0	19.6	30.8
비스킷	8.0	21.1	30.7
초콜릿	8.0	20.7	31.9
아이스크림	8.0	21.6	34.9

(자료: 이철호 외, 2009)



3. 식품안전 관리비용 의 증가

1. 식품사고 때마다 추가되는 규제 강화
2. 이물 신고 의무제 신설
3.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의무 확대
4.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제 입법예고



식품위생사건백서(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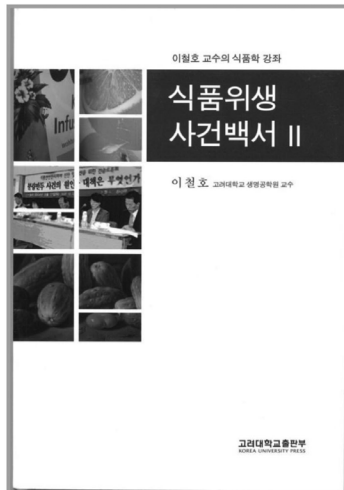


- ❖ 콩나물 농약오염 사건
- ❖ 우지 파동
- ❖ 접착제 당면 사건
- ❖ 산분해간장 MCPD 사건
- ❖ 화학조미료 사건
- ❖ 스테비오사이드 사건
- ❖ 해초 무침 유해 색소 사건
- ❖ 고름 우유 사건
- ❖ 통조림 납 오염 사건
- ❖ 톨루엔 오염 사건
- ❖ 포장재 랩의 유해 공방
- ❖ 녹즙기 사건





식품위생사건백서 ||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 ❖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 ❖ 병원성 대장균 오염 사건
- ❖ 광우병 파동
- ❖ 조류 독감 파동
- ❖ 아질산 염 유해 논란
- ❖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 ❖ 아크릴 아마이드 파동
- ❖ 환경호르몬 유해 논란
- ❖ 미니컵 젤리 질식 사건
- ❖ 방사선 처리 논란
- ❖ 유전자 변형 두부 사건
- ❖ 불량 만두 사건

식품위생 사건의 시대적 변화 양상



- 제조업자의 무지와 부주의
- 비전문가들의 과잉반응
- 소비자 단체의 부정적 시각
- 언론의 과장 보도 및 오보

- 첨단기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
- 세계적인 이슈의 국내 파급
- 당국의 전문성 결여와 오판
- 언론의 과장 조작 보도

시비의 진위가
명쾌히 밝혀지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음



이물검사를 위한 X-ray 투시기



과자 포장라인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항목	소요금액
분석장비 구입비 (PSL, TL, ESR 국내보유 총 466대)	46억 6천만원
분석장비 유지 보수비 (국내보유 대수 대비 연간 지출금액, 인건비 제외)	3억 4천만원/ 1년
조사 유무 검지 분석비 (국내 4개 식품회사의 6000개 샘플분)	1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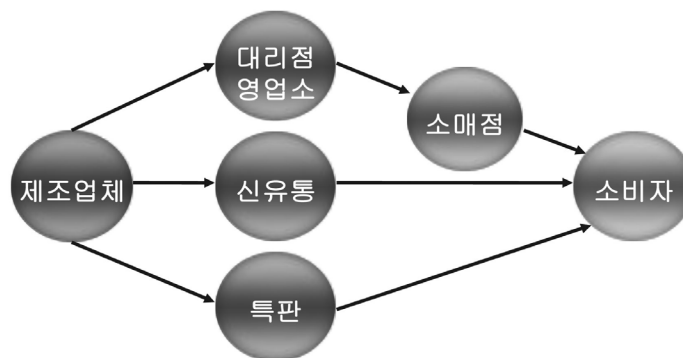
(자료: 이철호 외, 2011)



4. 식품 유통비용의 증가



식품의 유통경로



주1 : 신유통은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포함

주2 : 특판은 주로 B2B(외식업체, 군납 등의 기타 거래를 의미함)

주3 : 소매점은 신유통을 제외한 소매점을 의미함

(자료: 이정희, 2011)



식품관련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증감률



(기준연도 : 2010)

순위	업종	기업명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률 (%)	전년대비증감률(%)
1	유통	롯데쇼핑(주)	13,516,927	8.5	31
2	유통	(주)신세계	11,025,148	9.0	8.1
3	유통	홈플러스(주)	5,811,781	5.4	46.4
4	제조	CJ제일제당(주)	3,962,652	5.2	-21.0
5	유통	(주)GS리테일	3,473,705	2.7	-37.8
6	유통	(주)보광훼미리마트	2,289,646	3.3	31.4
7	제조	(주)농심	1,895,168	5.7	2.0
8	유통	홈플러스테스코(주)	1,793,603	-1.9	-14.1
9	제조	(주)삼양사	1,665,497	1.9	-40.6
10	유통	(주)코스트코코리아	1,578,845	5.5	61.3
19	제조	대한제당(주)	1,167,232	1.2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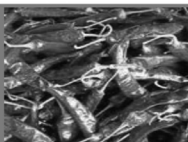

자료:식품산업통계정보



5. 저장 가공 유통 중 폐기식품 손실



농산물 수확 후 손실비용 추정

				
평균 생산량 (ton/year)	627,221 ^a	382,769 ^b	165,487 ^b	968,074 ^b
감모율 (%)	25 ^c	26.7 ^d	20.4 ^d	24.1 ^d
연간 감모량 (ton/year)	156,805	102,199	33,759	233,305
도매가격(원/kg) ^e	770	4470	13666	370
손실비용(원) (\$US million)	1,207억 (110)	4,568억 (415)	4,613억 (419)	863억 (78)

a ; 감자 수확 후 관리기술 매뉴얼, 임학태(2005)

b ; 농림부 채소류 생산 실적(2005)

c ; 반 지하 저장고 기준, 수확 후 관리기술 매뉴얼, 감자, 농림부, 농협중앙회(2005)

d ; 마늘 수확 후 관리기술 매뉴얼, 이승구(2006)

e ; 농산물 도매가격, 농수산물 유통공사, 2011. 5. 2 현재, 중품 기준

총 1조 1,251억원

(자료: 이철호 외, 2011)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가공식품 폐기 손실액 추정



(방사선조사 허가 품목)

품목명	2008 년			2009 년		
	출하액(억)	반품율(%)	손실액(억)	출하액(억)	반품율(%)	손실액(억)
다류	4,502	6.30	284	5,130	6.30	323
장류	8,900	2.01	179	9,192	2.01	185
조미식품	17,052	1.85	315	20,457	1.85	378
드레싱	1,524	0.73	11	1,833	0.73	13
합계			789억원			899억원

자료: 유통기한경과 식품폐기물의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연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2011)

→ 조사허가 품목 중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가공식품 폐기 손실액은 연간 약 899억



(자료: 이철호 외, 2011)

식량안보를 위한 식품가격 정책 제언



1. 식품가격의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 하다.
2.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3. 신기술에 의한 식품의 생산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4. 합리적인 식품안전 기준과 관리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5.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활용 확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6. 식품안전과 식품가격에 대한 국민 교육과 성숙한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식품가격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한 이유

1. 세계의 식량부족 사태가 장기화 심화되고 있다.
2. 앞으로 예견되는 식량파동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3. 식량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4. 국민의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다.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

1. 제품의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2. 부자와 가난한자가 고루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품질 고급화로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4.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5. 특히 쌀의 등급화 유통체계를 통해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신기술에 의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이유

1. 조사(IR)식품의 이용확대를 통해 수확 후 손실 절감, 폐기식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생명공학(GM) 식품의 소비 확대로 값싼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 진다.
3. 포장기술, 나노기술 발전으로 식품의 기능화, 고급화가 가능해 진다.



합리적인 식품안전기준과 관리기법의 도입

1. 위험편익분석에 근거한 식품안전 기준 설정 원칙을 두어야 한다.
2. 비용효과분석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와 모니터링을 제도화 해야 한다.
3. 식품가격을 고려한 식품안전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4.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관리 경영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다.(예: ISO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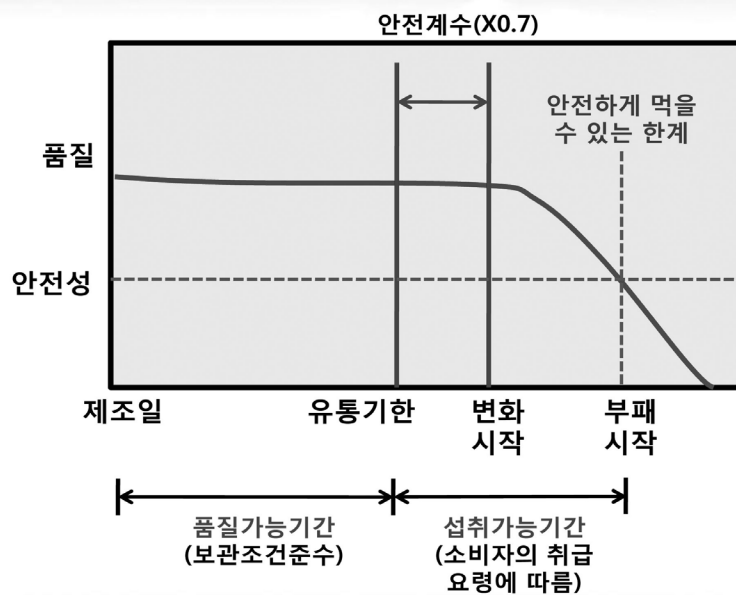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활용 확대 방안

1.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2. 유통기한 경과 폐기식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유통기한 경과 이후 가식기간을 명시하여 반값 판매 또는 Food Bank에서 활용하도록 제도화 한다.



식품의 유통기한과 가식기간



(자료: 한국식품기술사협회, 2011)



식품안전과 식품가격에 대한 국민 교육 강화

-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 서로 상충하고 상보하는 관계
식량부족 - 식품안전을 따질 여유가 없음
불안전한 식품 - 쌓아 놓고도 먹지 못함

식품안전 ↑ - Food Availability ↓ , 식품가격 ↑

식품안전과 식품가격을 조화시킬 사회적 합의가 필요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 선언문

- 一. 식량을 아끼고 증산하는 일을 생활화 하며 낭비를 부끄럽게 여긴다.
- 一.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만든다.
- 一.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一. 식량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 一. 농어촌을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국민이 된다.

결론

식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아래의 정책이 요구된다.

1.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식품가격의 점진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2. 식품의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차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3. 식품 유통구조와 역관세 현상을 개선하여 식품 원료 수급의 원활화와 가격인하를 도모한다.



결론

4. 식품 저장 및 생산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한다.
5. 불필요하고 비용효과가 낮은 안전관리 규제를 과감히 풀어 생산관리 비용을 낮춘다.
6. 합리적인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식품기업의 안전관리 비용을 낮춘다.
7. 소비자교육을 통해 유통기한에 대한 상식을 바르게 고쳐 폐기식량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가격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토론회 좌장



서울대 수의미생물학과
박 용 호 교수

학 력

워싱턴주립대학교대학원 수의미생물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 석사
서울대학교 수의학 학사

경 력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회장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아시아수의과대학협의회 회장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회장
미국 USDA 유방염과제 평가위원
미국 아이다호대학교 겸임교수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수



토/론/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곽범국 국장





Profile

곽 범 국

학 력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경 력

행정고시 합격(28회)
국세청 행정사무관
재무부 경제협력국 사무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사무관
同금융정책실 서기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서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파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자문관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서기관
同국고국 재정정보관리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 토론요지

최근 식품 물가가 크게 변동하고 있다. 식품 물가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에서 찾을 수 있다.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곡물이 2002년 대비 2003~2008년 동안 226%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내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FAO는 향후 10년간 ‘10년 대비 곡물은 20%, 축산물은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세계 곡물시장 불안의 첫째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상시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30~40년간 지구 평균온도는 1.0~1.4℃ 상승하였고, 호주·러시아·미국 등 수출국 곡창지역에 주기적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BRICs 등 신흥 경제국의 식량(육류) 소비증가 때문이다. 신흥 4개국 인구는 약 30억명으로 세계인구의 40%에 해당한다. 도시화와 소득증가에 의한 식량(육류) 소비 증가는 국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46.3% 상승하자 국제 옥수수 및 대두 가격이 각각 61%, 37.8% 상승하였다는 분석도 있다. 세 번째는 바이오 연료생산 증가에 따라 원자재 농산물 수요의 확대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운송비, 비료·농약비 등 생산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식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식품가격 상승에 서민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KREI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62%가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에 심리적 고통이 가장 컸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소득계층 200만원 이하)이 고소득층(400만원 이상) 보다 심리적 고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 가격인상 압박요인을 검토하고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식품기업들의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토록 하는 등 식품물가 관리를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주요 원재료와 식품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원재료의 국가가격, 수입가격(통관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며 추가 인상요인 또는 인하요인이

있는지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업계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둘째,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식품업계의 원가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밀가루, 설탕, 유지류 등 39개 원재료의 할당관세를 대폭적으로 운용하여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세계 곡물시장 불안 등 식품 가격의 상승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9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를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촉진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품목별, 브랜드별 가격차 등 정보를 전국 2,200개 소매점에 대한 가격정보(유통POS 데이터)를 aT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넷째, 가공식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이다. 식품은 장기보관이 어렵다는 특징으로 인해 유통비용이 공산품에 비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식품업계의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 인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 유통구조,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수준 등 Value chain을 분석하여, 유통단계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식품 안전성 강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이다. 농식품부 출범 이후 식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고부가 식품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 1,000억원 수준의 식품분야 정부 R&D 투자(농식품부, 농진청, 한식연 등 포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도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인 변동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국내 가공식품의 수급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 가계지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러한 식품가격의 변동요인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국제 곡물 관측 및 모니터링 실시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식품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문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김 동 환 교수





Profile

김 동 환

학 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 석사과정 졸업 (경제학 석사)

미국 위스칸신大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농업 및 응용경제학과 졸업 (경제학박사)

경 력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한국식품유통학회 이사

외교통상부 통상자문그룹 전문위원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부문 자문위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자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장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관한 분석에 대한 토론

이 교수님 발표에서는 최근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의한 식품가격 상승요인을 (1) 원자재 가격 상승, (2) 가공식품에 대한 역관세 차별, (3) 식품안전관리비용의 증가, (4) 유통비용의 증가, (5) 식품의 저장, 가공, 유통 중 폐기식품 손실 등으로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인 인식에 동의하면서 식품가격 안정화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산업은 전형적인 독과점 산업으로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상위 4개 기업의 누적 시장점유율(CR4, four firm concentration ratio)이 60%가 넘어 독과점이 우려되는 식품산업 부문은 아스크림제품류, 특수영양 식품류, 면류, 당류, 다류, 청량음료 등이다. 최근에도 라면, 설탕 등에서 업체간 가격 담합이 적발된 사례가 있어 독과점 행동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과점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공개적인 담합도 문제이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암묵적 담합(implicit collusion)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 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식품 시장을 경쟁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식품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대형마트가 발전하면서 식품 가격안정화에 큰 기여를 해 왔다. 대형마트는 제조업체와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막강한 바이오파워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가를 인하하여 식품가격을 다른 유통경로에 비해 낮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가 고급화되면서 혁신적인 가격파괴 업체로서의 매력도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식품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유럽형 하드 디스카운트스토어(hard discount store)의 도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하드디스카운트 스토어는 '잘 팔리는 상품'으로만 취급 상품을 압축하고 대량구매와 비용절감을 통해 '양질의 PB 상품을 초저가'로 공급하는 '생필품 위주의 소규모 매장'이다. PB상품의 구성 비율이 70%이상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으로만 진열(1,000개 내외)하기 때문에 상품 회전율이

빠르다. 매장은 1,500㎡ 이하의 소규모 매장으로 주거밀집 지역 등 소비자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 위주로 출점한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독일의 Aldi와 Lidl이 있다.

유통 측면에서는 과포장 억제 등 불류비 절감 대책도 시급하다. 플라스틱 컨테이너 등의 이용 확대로 포장비 절감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별로 상이한 포장 규격을 통일시켜 포장비 절감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유통업체 PB 상품의 경우 업체별로 포장규격이 상이하여 낭비요소가 커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선물용 상품의 과포장 억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식품산업의 원자재인 식량 조달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메이저로부터 현물 베이스로 식량을 구입하고 있어 가격변동성이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물시장 등을 활용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곡물수입회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 식량기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문

중앙일보 식품전문기자 박 태 군 박사





Profile

박 태 균

학 력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수의공중보건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 박사

경 력

중앙일보 편집국 사회부문 부장, 전문기자

경향신문 편집국 기자

미국 조지아대학 연구원

동아일보 기자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 토론문

본 토론회의 주제인 최근 식품가격 상승요인에 대한 한국식량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의 발표 내용에 공감한다. 특히 (1) 원자재 가격 상승, (2) 식품의 저장, 가공, 유통 중 폐기식품 손실 (3) 식품안전관리비용의 증가, (4) 유통비용의 증가 등은 식량 가격을 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여겨진다.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식량 위기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과 사막화, 세계 식량의 블랙홀로 일컬어지는 중국과 인도의 동물성 식품 수요 급증, 옥수수 등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증가, 투기자본의 유입에 기인한 국제 곡물시장의 교란, 유가 급등에 따른 생산비와 수송비의 증가 등으로 분석한 것도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2년 전 가격과 비교해 밀 팜유와 라면, 밀 팔과 단팔빵, 콩과 두부 가격을 밝힌 것은 현재 우리 식품업계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밀 가격이 30%, 팜유 가격이 70% 이상 상승한 현실에서 라면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저장, 가공, 유통 중 폐기식품에 의한 손실액이 1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계량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못지 않게 이들 폐기식품에 의한 손실이 막대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유통기한 제도의 손질, 소비자 교육 등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이사장의 정책 대안 가운데서는 (3) 신기술에 의한 생산비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방사선조사기술의 활용과 유전자 변형(GM)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것도 신기술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5) 폐기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도 눈에 띈다. 소비자 교육을 통해 유통기한에 대한 바른 상식을 알리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게 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6)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그리고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교육을 강조한 것도 시의적절한 정책 대안으로 여겨진다.

‘현 물가 상황평가 및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의 발표에서 공급측면의 물가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집중됐다는 분석에 공감했다. 특히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 구제역 피해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랐다는 발표 내용은 주무 국장으로서의 고민이 읽혀졌다. 국제유가와 거의 대등하게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을 올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농수산물 등 곡물은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 곡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은 잡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정책 묘안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토/론/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관 박 해 경 박사





Profile

박 혜 경

학 력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사

고려대 식품공학과 석, 박사 (식품화학 및 응용영양학 전공)

경 력

한림대 한국영양연구소 연구원

식약청 식품규격과 연구사

식약청 식품규격과 연구관

식약청 영양평가과장

식약청 식품첨가물과장

식약청 영양정책과장

(현) 식약청 영양정책관

식품안전 vs 식품가격

◇ 변화하는 환경

○ 고물가시대 “3不”¹⁾

- “잉여” → “불충분”

- 공급부족 : 도시화, 사막화로 인한 농경지 감소,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
- 소비증대 : 신흥국 경제성장률, 인구증대, 바이오연료 등

- “안정” → “불확실”

- 세계경제 불확실성, 달러가치하락 등

- “안전” → “불안전”

- 농산물 매개질병 : 피해규모는 증가
- 인수공통전염병, 신종바이러스, GMO(?) 등

○ 소비자 요구 증가

- 고품질, 알권리에 대한 needs 증가
- 생산, 유통, 저장, 소비단계까지 안전성 관리 강화
- 식품안전은 기본, 영양과 건강까지 확대

◇ 식품위생(Food Hygiene) & 식품안전(Food Safety)

○ 식품위생(Food Hygiene)

- (WHO)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의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safety), 건전성(wholesomeness, soundness)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단

○ 식품안전(Food Safety)²⁾

- assurance that food will not cause harm to the consumer when it is prepared and/or eaten according to its intended use

○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련 법령³⁾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염관리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그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 등

○ 미국의 식품안전법안⁴⁾

- 연방규제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오염에 대응하기 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둠.
- 예방적 통제, 검사와 준수, 수입식품의 안전, 대응조치, 제휴기관과의 협력제고 등 포함

◇ 식약청의 비전 & 미션⁵⁾

○ 비전 :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건강 확보

○ 미션 : 국민건강보호증진과 식의약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 대응, 지원

◇ “규제합리화”를 통한 식품안전확보

○ 식품안전기준 설정 및 적용 원칙⁶⁾

- 대상물질과 물질의 특성에 따른 일반원칙 설정·운영
- 식품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품질 기준 삭제 (자율기준으로 운영)
- 위해평가에 기초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사회적 여건 감안

○ 위해관리절차에 따른 규정 마련

조사·연구·정보 →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초안 마련 → (공청회) → 입안예고
및 WTO 통보 → 심의위원회 → 개정안 마련 → (부처 이견시 총리실 식품안
전정책위) → 규제심의(자체 & 총리실) → (법제처 심의) → 제·개정 고시

〈 참고자료 〉

- 1) SERI CEO ('11.8.11) - “농산물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대응”
- 2)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CAC/RCP 1-1969, Page 5 of 31
- 3)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0310호, 2010. 5. 25제정, 2010. 11. 26시행) 제2조 5항
- 4) FDA>Food>Food Safety>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2010. 12. 21)
- 5) 식약청, “국민의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희망 미래 2020”
- 6) 식약청 식품안전국 “식품 안전 기준 설정 및 적용 원칙”(2011)

토/론/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손성락 국장





Profile

손 성 락

학 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 석사)
세종연구소 국정과제 연수
중앙대학교 공공기관 전문 경영자과정 연수

경 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장
사이버기획팀장, 리콜제도팀장, 기획예산팀장
비서실장, 전략기획실장, 전략경영본부장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자동차 제작 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주택 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운영위원회 위원(국토해양부)
제품안전전문위원회 위원 (기술표준원)

식품안전과 식품가격정책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거나 대형 할인매장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이유가 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와 관련하여 주된 주제인 식품안전과 식품가격정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발표자들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후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 있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식품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안전성을 결여한 상품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줌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존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의 포름알데히드 사료 사건, 분유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사고, 멜라민 과자 사건, 과자의 생쥐머리 이물 사고, 김치 기생충 알 사건, 불량 만두 사건 등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법이나 제도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보다 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소비자들로부터 구매라는 최종 검증 절차를 통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여 살아남는 기업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특정제품에 대하여 기업이 독과점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쟁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장이 경쟁체제 속에 놓이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정책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시장에서의 가격은 상품 자체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최종 심판을 받는 결과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선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판단할 정보인 준거가격 등 객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시장 상태에서 기업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타사 제품과 여러 가지 요소 비교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가격을 기초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독과점 상태에 놓여 있거나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현실은 대부분의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를 개선시키는 노력과 병행하여 상대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같은 상품군에 있어 다른 브랜드 제품의 경우 똑 같은 상품은 거의 없으므로 개별 상품에 대한 성분·함량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나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상품의 홍수 속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정확한 비교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국내외 가격차조사, 매장별 가격비교조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교조사 등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월간 ‘소비자시대’, T-프라이스, T-게이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간접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 가격 책정 유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투자 비용이나 제품의 개발비용 등이 일정부분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기업의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제품의

개발은 기업이 생존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목으로 신제품에 대하여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출시하면서 기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은 시장에서 없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옛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되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된다는 말이 있듯이 기업이 소비자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는 늘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특히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고 많은 소비자들이 힘들어 할 때 지금까지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입은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와 국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 온 과거를 생각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품의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대부분 소비자들은 오래 기억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신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호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신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특히 식품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는 식량 안보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조사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였고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행위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직결되는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진적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의 부담 등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번 오른 제품의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여 선불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를 낮추는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종원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펼쳐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만 중점적으로 그치는 정책이 아닌 평상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며 예방적 차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적 노력과 정부 차원에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둘째,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셋째,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넷째,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다섯째,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 여섯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곱째,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여덟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위 8대 권리 가운데 오늘 주제와 특별히 관련이 많은 첫 번째 안전할 권리와 두 번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세 번째 선택할 권리는 우리 모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소비자 권리라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이 담보된 양질의 상품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 주체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면 불안한 물가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 확보 문제가 출발점이 되어 설립된 소비자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경제규모에 비하여 소비자부분의 역할과 비중이 너무 작은 것이 소비자들의 후생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신 영 선 국장





Profile

신 영 선

학 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경영학석사)
영국 리버풀대학교 대학원(경제학석사)

경 력

행정고시 31회(재경직)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총괄과, 재정경제원 국제경제과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기업집단과, 총괄정책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파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2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국제기구과장
주OECD대표부 경쟁협력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본부 시장분석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 토론포지

1. 원재료 값이 오를 때 가격담합이 증가

-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유인이 큼

□ 사례1 : 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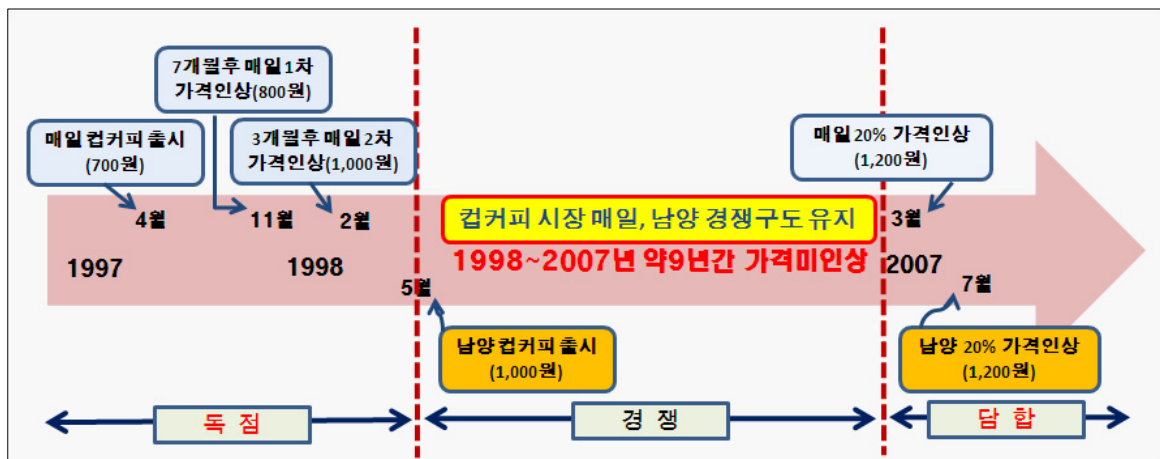
- 상위 3사가 82%를 점유하는 과점시장
- 대두가격이 상승한 후 3사는 2008년 두차례 두유가격을 담합인상
- 2008. 7월 대두가격 하락후 두유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비대칭성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1억원 부과

□ 사례2 : 치즈

- 상위 4사가 95%를 점유하는 과점시장
- 수입치즈 가격상승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인상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6억원 부과

□ 사례3 : 컵커피

- 상위 2사가 76%를 점유하는 과점시장
- 시장경쟁상황에 따른 컵커피 가격(편의점기준) 변동 추이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8억원 부과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위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수직적 가격제한’ 행위의 전형적인 수단
 -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
 - 유통업체간의 가격경쟁으로 제조업체의 공급단가 인하 요구를 우려
- 사례 : 당면, 참기름(시정명령 및 과징금 6.6억원 부과)

3. 물가안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 엄중 제재,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유도

토/론/문

식품음료신문 이 군 호 사장





Profile

이 군 호

학 력

중앙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

경 력

산업통신 경제부 기자

보건신문 부국장

제일경제(현 아시아경제) 편집담당 상무

보건신문 사장

現 식품음료신문 발행인 겸 사장

現 한국전문신문 협회 이사

現 한국초콜릿카카오협회 자문위원

現 ILSI KOREA 자문위원

現 전국FOODBANK 자문위원

現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위원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 요지

식품가격 인상이 물가 인상의 주범인양 도마에 올랐다. 이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정책기조와 소비자 여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구조적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적 안정화 정책은 자칫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글로벌 시대 외국기업에 경쟁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물가 문제에 있어 식품기업 현실은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우선 국내 곡물 자급률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격상승의 외적 요인이 크다. 특히 가공식품의 주원료인 밀 옥수수 설탕은 물론이고, 카카오 오렌지농축액 대두유 등의 국제가격 앙등으로 제조업체 부담이 크다. 항목별 주요 원재료의 가격 인상률을 보면 2011년 7월말 현재 소맥분류 8.6% 설탕 31.0% 전분당류 13.6% 오렌지주스의 주요 원료인 오렌지 농축액(브라질산)은 246%에 이른다. 제과류와 라면에 많이 쓰이는 아자유는 올 상반기 기준 120%, 팜유 대두유도 50%나 올랐다. <별표참조> 게다가 가공식품의 포장에 있어 주요 원재료인 합성수지류도 상반기 기준 23%나 인상됐다. 이와 같이 국제가격 앙등으로 인한 식품원가 인상은 고스란히 기업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제곡물류 및 원재료 가격 완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가공식품 가격 안정 전망도 매우 어둡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식품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제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 GMO 표시제 = 식품가격 상승 유발요인 제도

종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 중에서 원료 함량 5순위 이내만 표시(간장 전분당 제외)토록 했으나 2011년 6월 7일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으로 오는 12월 18일부터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규제 심사 중이다.

▷ GMO 표시 확대에 따른 문제점

- ① GMO 표시제 시행에 따른 설비 기계 고체 및 검사설비 비용 상승
- ② 값비싼 non-GMO 곡물 이용 비용 상승
- ③ GMO, non-GMO 구분 유통에 따른 국내에서의 생산 및 유통비용 증가
- ④ 대두 및 옥수수 관련 식품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식품산업 전체에 1.49%까지 비용을 증가시켜 6251억 원에서 9553억 원까지 식품생산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GMO 수출국인 미국에서조차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채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산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데다 GMO 표시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서 이의 확대시행은 물가를 상승시킬 뿐 소비자 기업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GMO 확대로 영향 받는 식품은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마요네즈 면류 빵 과자 비스킷 식용유 다류 커피 치즈 어묵 햄 소시지 인삼제품 등 국민다소비 식품 거의 다 포함돼 있다.

◇방사선조사식품 조사 표시제

식품의 발아억제 속도를 지연시켜 식품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병원균이나 기생충, 해충 등을 제거해 위생적인 식품 제조 가공하기 위한 기술로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방사선표시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식품업체들은 방사선조사 원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사선조사 검사 장비를 구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정확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범법기업으로 낙인될 수 있으며 소비자불안을 유발해 국내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공산이 매우 크다.

즉 방사선 조사된 단일 원료는 연구가 충분히 이뤄져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나 복합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중 미네랄 성분이 없는 경우나 지방성분이 다량 함유된 경우는 조사 여부 판정이 매우 부정확하다. 또한 가공식품의 경우 다양한 원료가 포함돼 있고 구조화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분석자의 숙련도에 따라 열광곡선의 강도차이로 조사여부 확인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공인 분석기관의 분석물량 수용능력이 부족으로 이의 이용마저 용이하지 않고 과다한 분석비용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증 비용이 원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표시제 도입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방사선조사’ 용어 대신 ‘저온조식식품’ 또는 ‘이온화살균식품’으로 순화함으로써 선진외국과 같이 일정함량 이상인 식품에만 표시 의무화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방사능과 방사선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식품의 재검사

식품의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석방법의 차이가 있을 때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재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이의 신청을 요청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사례> 올 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모 유업체의 조제분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해당업체가 타 공인검사기관에 검사한 결과 불검출로 나옴에 따라 검역원 측에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의 여파로 해당사의 제품은 소비가 급감하고 해외 수출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행정처분에 앞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검사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통기한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과 식품의 고유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품질유지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 ▷ 문제점 = 대형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유통기한이 3분의 2만 지나면 반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거래처 유지를 위해 반품을 수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2010년말 현재 1조원 대에 이르고 있다.
- ▷ 국제적 경향 = 부패 변질 등 우려가 높아 단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품에 대해서만 소비기한으로 표시 판매토록 하고 있으나 비교적 저장성이 길고 변질 등 품질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식품들은 ‘품질유지기한’, ‘최소보존일’ 사용기한으로 정해 유통성을 갖도록 해 식량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 HACCP 의무 적용과 이물신고제도

HACCP의 의무적용 품목이 확대되면서 이의 인증을 받기 위한 설비구축을 증가시켜 적게는 몇 천억 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 원까지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물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이물관리를 위한 과다투자 등으로 인한 원가비용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구실을 붙여 제조업체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의 비용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25% 상당에 이르고 있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별표〉 최근 3년간 가공식품 가격 상승 요인

			2009년 1~7전년 비인상률	2010년 1~7전년 비인상률	2011.1~7 전년비 인상률	비고
직 접 비	원료비	유지류	-	-	18.7%	국내식품대기업
		설탕류	-	-	31.0%	"
		유제품류	-	-	7.6%	"
		소맥분류	-	-	8.6%	"
		견과 및 두류	-	-	13.6%	"
		전분당류	-	-	13.6%	"
		콘그리츠	-	-	18.8%	"
		전란액	-	-	36.5%	"
		대두유	-	10.0%	49.1%	"
		팜유	-	19.2%	50.9%	"
		야자유	-	27.4%	119.3%	"
		브라질오렌지주스	-	-	246.0%	"
		이스라엘오렌지주스	-	-	115.4%	"
		커피빈	-			
		돼지고기가격	15.1%	-10.8%	29.6%	aT ‘농수산물유통정보’
		닭고기가격	34.2%	10.6%	4.7%	"
		계란가격	13.3%	-6.0%	22.2%	"
	포장비	합성수지류	-	-	22.6%	국내식품대기업
간 접 비	노무비	최저임금 인상	0.0%	3.5%	4.0%	"
		승급호봉 인상	2.1%	2.1%	2.1%	"
		계	2.1%	5.6%	601%	"
	에너지	전기요금	12.0%	4.0%	5.0%	산자부
		LNG Gas	11.0%	8.0%	6.0%	"
		휘발유	-13.0%	11.2%	12.1%	한국석유공사 ‘Opinet유가정보시스템’
		경유	-19.1%	10.8%	16.0%	"
	기타	유통업체 장려금	17.4%	25.7%	26.1%	국내식품대기업
		유통업체물류비지원	16.1%	38.0%	23.8%	"
		계	17.0%	29.5%	25.3%	"

토/론/문

한국소비자연맹 이 향 기 부회장





Profile

이향기

학 력

성신여자대학교 화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경 력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심의위원
식약청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물 위생심의위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문위원
식약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위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 원고

가.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 불만 내용

1. 축산물

- 한우가격 하락해도 일반 음식점 소고기 가격 무변동
-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수입산이 국내산 둔갑)

2. 농산물

-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수입산이 국내산 둔갑)
- 안정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 (배추파동 등)
- 유통구조에 따른 가격 상승

3. 가공식품

- 밀가루, 설탕등 수입가격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가격 미반영
- 유통구조

이로 인해 정부 및 생산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와 국민 불안감 조성

나. 소비자단체 활동

- 2011년 8월부터 2달간 장바구니에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 외식비 가격 실태조사 (설펍탕, 김치찌개, 자장면, 냉면, 칼국수, 삼겹살)

① 가격조사

- 가격 실태조사 (평균 가격, 최저·최고가격)
- 가격 변동 여부
- 가격 변동 이유 (식재료 원가, 인건비, 임대료, 세금, 유지비, 기타)
- 용량변화량 및 원인 (삼겹살) 등

② 원산지 조사

이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의 동향 및 원인파악을 하고 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조사결과〉

	1년 전 대비			인상요인
	가격	중량	최대 변화 지역	
삼겹살	▲ 14.3%	▼ 1.0%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물가상승 구제역/돈육가격 상승 4대보험증가/인건비 상승
설령탕	▲ 6.5%	—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물가상승 4대보험증가/인건비 상승 문제점 * 원산지 변경
칼국수	▲ 5.0%	—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물가상승(밀가루) 4대보험증가/인건비 상승 세금인상 임대료 인상 문제점 * 원산지 변경
김치찌개	▲ 5.0%	—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물가상승(배추 등)
자장면	▲ 7.7%	—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물가상승(밀가루)
물냉면	▲ 4.2%	—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물가상승 4대보험증가/인건비 상승 임대료 인상

출처 :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다. 식품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 소통강화

- 정부의 장기적 계획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와의 소통 / 신뢰구축
- 정부의 단기적 계획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와의 소통 / 신뢰구축
- 소비자와의 소통 방법 개선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리스크 비용에 따른 가격 상승요인 해결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이해)

○ 식품 규격 기준 및 관리 방안

- 부당,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
- 합리적인 식품 규격 기준 및 관리

○ 효율적인 유통구조로의 개선

- 안정적 공급 (농산물 가격 변동)
- 가격구조 개선

토/론/문

한국인정원 심사기획단 최 성 환 단장





Profile

최 성 환

학 력

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 력

한국인정원 심사기획단장

KAS 인정심의위원

KOLAS 기술전문위원

ISO TC 176 전문위원

ISO TC 46 전문위원

ISO CASCO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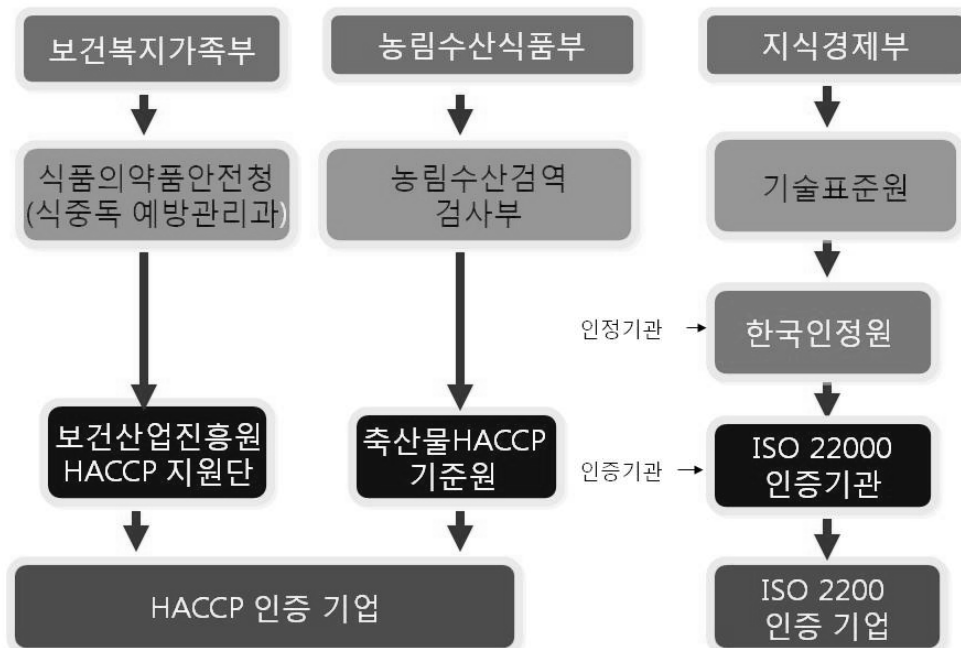
ISO 9000 인정심사원

TL 9000 검증심사원

ISO 22000 인정심사원

HACCP와 ISO 22000 상호인증으로 물가안정 구축

1. HACCP과 ISO 22000 운영체계



2. HACCP과 ISO 22000 적용범위

수확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GAP				
		HACCP		
		GMP	GHP	
		가공식품KS		
친환경농산물인증				
		G 마크		
ISO 22000				

3. HACCP과 ISO 22000 비교

구분	ISO 22000	HACCP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제도 목적	식품공급사슬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달성	식품제조 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해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법률근거	-	축산물위생관리, 식품위생법 등
FSC상의 적용범위	FSC* 전 범위	가공
인증대상 (인증범위)	경영시스템 (조직)	식품의 가공공정 (생산자/품목)
접근방식	시스템적	구체적(지율방법론)
운영형태	민간주도/고객만족중심/자율	정부주도/규제중심/강제자율
인증기준	ISO 22000	HACCP 7원칙 12단계 요건
인증기관	한국인정원(KAB)이 지정한 7개 인증기관	2개 지정기관
인증절차	인증업무규정	시행규칙

※ FSC(Food Supply Chain 식품공급사슬)

4. HACCP과 ISO 22000을 통한 물가 안정

- ISO 22000 기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HACCP 지정을 위한 현장 평가 면제 사항 또는 HACCP 받은 경우 ISO 22000 평가일수 감소 적용 혜택
- HACCP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인센티브중 일부는 조속히 ISO 22000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기업에 가중되는 추가적인 인증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두 표준의 장점을 합친 Intergrated Managment System 시범도입 운영으로 비용 절감 기여
예) HACCP + ISO 22000 + ISO 14000 등

- 국제상호인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글로벌경영시스템 표준 도입 및 확산
예) 국제협력기구(IAF)에 상호인증협정을 위한 작업반 참여

토/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최 지 현 본부장





Profile

최 지 현

학 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및 대학원 농업경제학과(경제학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식품경제학 박사

경 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
농식품부 OECD 식품경제분야 자문위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위원회 심의위원
농식품부 농식품안전정책 자문위원
농식품부 식품유통 및 식품산업정책연구 평가위원
한국농업경제학회 상임이사

토론요지

식품안전관리비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식품안전관리 비용은 HACCP나 ISO 22000과 같은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 및 기자재비용과 관련인건비가 가장 크며, 원산지표시나 GM표시와 같은 식품표시와 관련한 비용, 식품안전관련 소비자부서 관리비용 등으로 크게 구분됨.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HACCP 이나 ISO 22000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제도이므로 공장설립 또는 기존시설의 개보수과정에서 많은 비용투자가 필요함.

원산지표시방식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보다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은 표시관련비용도 상승하는 추세임. 식품업체는 원산지표시규정에 의해 원료수입국이 변경되면 포장재를 다시 바꿔야 하는데 50% 정도가 수입국변경으로 년 1회 이상 포장재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남. 년 1회 변경 업체 22%, 2회 변경 업체 11%, 3회 이상 변경업체가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제조원가에서 포장재 비용이 평균 12.5% 정도이며, 포장재 변경에 따라 평균 16.6%의 원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포장재 변경의 주요인은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식품표시규정의 변경(69%)인 것으로 조사 됨.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포장재 변경 외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의 구분을 위해 싸이로의 추가 증설, 보관 창고 증축 등의 비용도 발생함.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HACCP이나 ISO22000 등의 도입비용은 불가피함. 다만 두 가지 인증을 중복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므로 글로벌 식품안전경영인 증인 ISO22000에 대한 국가적 홍보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표시 등과 관련해서는 업체의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잦은 원산지표시규정 개정은 지양하고, 원산지표시변경에

대한 기업 상세정보는 업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무리 좋은 표시제도라도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제조비용이 증가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와 같은 식품안전관련 제도 개선 시에는 미국과 같이 반드시 경제성분석을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문

한국식품기술사협회 황 이 남 회장





Profile

황 이 남

학 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농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생물공학과 식품 및 발효전공(박사과정)

경 력

대상(주) 중앙연구소장, 제약사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

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현)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현)법원행정처 식품분야 법원전문심리위원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 회장

아시안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폐기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

1. 식품의 유통기한

식품의 유통기한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수입식품은 수입자)가 식품의 내적 및 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식약청이 정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적합하게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업체에서 실험을 통하여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계수(0.7~0.8)를 곱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실제 부패 및 변질이 일어나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기 때문에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관능적으로 제품이 안전하면 섭취할 수 있다.

2. 식품폐기로 인한 손실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가 2011. 7-8 50여개 국내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폐기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식품 폐기 원인 중에는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35%), 유통과정에서 취급 부주의(27%), 유통업체의 조기반출 요구(23%), 기타(2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식품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유통기한 전의 반품비율이 29%, 유통기한 후의 반품은 71%로 나타났다.

반품율은 수분함량이 많은 식품일수록 반품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전체 평균 반품율 1.3% 어육가공품 3.1%, 음료류 2.4%, 과자류 1.7%, 식품첨가물 1.2%, 축산물 가공품 1.2%, 식육알가공품 1.1%, 빵떡류 0.8%, 면류 0.6%, 시리얼류 0.4%, 커피류 0.3%, 밀가루 0.3%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총폐기량은 370,048톤에 이르고 총손실액은 5,17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숫치는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식품의 유통기한과 반품 손실비용 분석을 발표(2011. 3. 16)한 반품손실액 2008년 5717억원, 2009년 6464억원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가 식품폐기의 원인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식품폐기의 주된 원인이 반품과 취급 부주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기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3. 폐기식품 절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부패 및 변질된 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식용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대할 때는 무조건 폐기하기에 앞서, 유통경로상 온도관리가 잘 된 식품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색, 맛, 냄새,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안전계수가 20-30% 감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소비자의 식품보관 및 식품 구입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식품의 유통과정은 용도 및 성상에 따라 상온유통과 냉장유통으로 구분되는 데, 가정에서는 온도 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폐기량을 줄일 수 있고, 신선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식품은 제조사나 공급자로부터 권장하는 식품의 보관요령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다.

식품의 진열에 있어서 보통 매장의 진열대는 유통기한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식품부터 맨 뒷자리에 진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남은 맨 뒷자리에서 식품을 꺼냄으로써 매장 식품의 신선도 관리를 어렵게 하고, 다른 소비자의 신선 식품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로서 좋지 않은 태도이다. 따라서 진열된 순서대로 식품을 구입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경과한 식품을 그냥 버리기 보다는 맛, 색, 냄새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상이 없으면 섭취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2) 식품업체의 바람직한 방향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할인판매나 봉사단체 기증하여 폐기량을 절감시키고, 취급점포나 소비자에게 유통경로를 준수시키도록 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바람직한 방향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식품폐기량 줄이기 운동과 유통기한, GMO식품, 방사선조사 등의 표시제도를 개선하고, 선진국보다 강화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